쟁점별 해석 메모 · 검토 초안

검토 정보

JJ시청 시민협력과 / JJ-민원-가상-1104 / 기준일 2026-11-06 / AI 정리 후 담당자 검토 전

질문·사실

무료 주민 진로체험 행사 사용료 200,000원의 전액 감면 요청. 행사 2026-11-02, 신청 2026-11-04. 공익 목적 인정 문서와 사전 접수 기록 미제출.

실제 법령과 가상 기준 구분

실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첫 문장: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발췌묶음 1쪽). 개별 감면율은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 아래 감면율은 가상 조례의 설정이다.

쟁점: 감면 대상 / 가상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 발췌묶음 2쪽

"시장은 공익 목적의 주민행사로 인정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참가비가 무료라는 사유만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잠정 해석

무료 행사라는 사실만으로 대상 확정 불가. 공익 목적 인정 여부 (확인 필요).

확인할 일

사업 담당: 행사계획서와 공익 목적 인정 문서 확보

쟁점: 감면 범위 / 가상 조례 제8조제1항 / 발췌묶음 2쪽

"시장은 공익 목적의 주민행사로 인정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잠정 해석

제공 조례의 감경률은 50퍼센트. 전액 감면의 근거는 제공 자료에서 찾지 못함 (확인 필요).

확인할 일

시설 담당: 현행 조례 전문·부칙·별도 감면 근거 확인

쟁점별 해석 메모 · 확인할 일

쟁점: 사후 신청 / 가상 조례 제8조제3항·가상 지침 4항 / 발췌묶음 2·3쪽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일 전에 감면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 후 접수된 감면신청은 조례상 처리 근거를 확인하여 법무담당과 협의한다."

잠정 해석

행사 2일 뒤 신청. 지침의 협의 절차가 예외 허용 근거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확인 필요).

확인할 일

사업·법무담당: 사전 접수 이력·사후 처리 근거·적용 시점 검토

금액 대조 · 조건부 계산 예시

기본 사용료 200,000원 × 50퍼센트 = 감경액 100,000원. 차액 100,000원. 감면 대상·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산술 예시이며 실제 부과·환급 결정이 아니다.

2025년 안내문 처리

발췌묶음 4쪽은 참고자료다. 현행 조례와 다른 안내의 적용 여부·게시 주체·유효 기간 등은 확인 필요. 이를 근거로 전액 감면을 확답하지 않는다.

담당자 검토용 요약

전액 감면을 확답할 근거는 제공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공익 목적 인정 여부, 감면 범위, 사후 신청 처리 근거를 확인한 뒤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확정 전 추가 검토

시설의 법적 성격과 다른 법령 적용 여부, 조례 전문·부칙·경과조치, 신청일·사용일에 적용되는 규정, 감면권자·전결 기준을 확인한다. 원문 인용과 사람의 판단은 분리한다.

검토 기록

작성: 사업 담당 / 협의: 시설·법무담당 / 최종 확인: 미확정. 실제 처분·대외 회신은 담당자 검토·결재 후 별도 작성.